

대법원 2024도99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이, 인터넷 방송에서 당선될 목적으로,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A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, 인턴 근무를 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

대법원 3부(주심 대법관 오석준)는, **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,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**(대법원 2024. 12. 12. 선고 2024도9915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가.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

■ 피고인

- 2018. 9. 7.경부터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중 2020. 3. 16. 퇴직
- 2020. 4. 15.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

■ A

- 피고인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B의 아들

나. 공소사실의 요지

-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·방송·신문·통신·잡지·벽보·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·가족관계·신분·직업·경력·재산·행위·소속단체,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안 됨
- A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근무를 한 적이 없고, B의 배우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인턴 근무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음
-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. 3. 31.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A가 인턴 근무를 했고, 자신이 이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함
-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·통신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

2. 소송경과

가. 제1심

- 유죄[벌금 80만 원]

나. 원심

- 쌍방 항소 기각

- 판단의 이유

-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, 피고인에게 당선될 목적도 인정됨
- 피고인의 발언은 '피고인의 행위'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함
-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
- 피고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

- ▣ 피고인 상고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▣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'사실의 공표', '당선될 목적'이 인정되는지 여부
- ▣ 공소권 남용 여부

나. 판결 결과

- ▣ 피고인 상고 기각(원심 수긍)

다. 판단 내용

- ▣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,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